



법과 정치

1. 국회

정답 ⑤

①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여당과 야당은 집권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②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관할한다. ④ 국정 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③, 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원 단체이고, 상임 위원회는 각종 안건의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한다. 따라서 두 기구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2. 과잉 금지의 원칙

정답 ②

제시된 헌법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과잉 금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3. 사회권

정답 ②

환경권, 교육권, 노동 3권은 사회권에 속한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되었다. 그리고 재정이 밀받침되어야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열거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4. 헌법 소원 심판

정답 ③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④ 행정상 손해 배상은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⑤ 형사 보상 청구는 구속된 이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5. 상속

정답 ②

ㄱ.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은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을 하게 된다. ㄴ.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2을 더 받게 되므로 어머니의 상속분은 4억 5천만 원이다. ㄷ.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여동생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6. 형사 보상 요건

정답 ④

ㄱ, ㄴ. 구속 수사를 받은 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속된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을은 검사로부터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ㄷ. 형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어야 하므로 병은 구속되었을 것이다. ㄹ. 형사 피의자는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7. 비례 대표제

정답 ④

갑국의 의회 선거 제도는 5% 미만을 득표한 군소 정당에게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비례 대표제이다. ④ 비례 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 소지가 크지만 갑국의 경우 유효 투표의 5% 미만을 득표한 군소 정당에게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으므로 군소 정당이 난립할 소지가 적다. ① 5% 미만을 득표한 군소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② 기본적으로는 비례 대표제이므로 양당제를 촉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거대 정

당에게는 비례 대표제보다는 다수 대표제가 유리하다. 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동일 정당 소속 후보자 간에는 득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8.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률 사례 분석

정답 ⑤

⑤ 죄형 법정주의의 하위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① 해당 법률 조항은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법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② 해당 법률 조항은 처벌 법규이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③, ④ 법의 내용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

9. 의원 내각제

정답 ①

갑국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내각에 대한 의회의 신임 여부가 내각의 존립을 결정하므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② 양원제 의회 구조이므로 신중한 입법에 유리하다.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⑤ 총리의 의회 해산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1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④

④ 투표율이 52%이고, 여당의 득표율이 48%이므로 전체 유권자 중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30% 미만이다. ① A당은 전체 의석의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단독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없다. ② 투표의 등가성 원칙이란 1표가 선거 결과 기여도에 있어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역구 선거가 정당 명부 선거보다 투표의 등가성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③ A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연립 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하지는 않다. ⑤ A당의 경우에는 과대 대표되었지만, B당의 경우에는 과소 대표되었다.

11. 헌법 재판소

정답 ③

A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ㄴ. 정당 해산 결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에 가능하다. ㄷ.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고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담당한다. ㄱ. 명령·규칙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대법원이다. ㄹ. 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정답 ③

③ A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면책될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민사상 손해 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다. ② 을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④ A는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⑤ 갑은 동물의 점유자로서, B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무과실이 입증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3. 정치 집단

정답 ⑤

헌법에 의해 그 해산이 직접 규율되는 C는 정당, 특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이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①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대의 정치에서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국민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정당은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과 달리 여론을 집약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나 지지를 투입하는 투입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

14. 주민 소환제의 효과

정답 ④

제시된 법률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다.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 그 직위에서 파면하는 제도로,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이 제도는 지방 행정의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ㄴ. 주민 소환의 대상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다.

15. 로크의 사회 계약설

정답 ⑤

제시된 자료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로크는 자신들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부를 수립한 인민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파괴될 때 기존의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건설할 권리, 즉 저항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②, ③은 루소의 주장이다. ④ 로크는 인민들 간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16. 부패 방지

정답 ①

제시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 권익 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부패 방지는 권력 분립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17. 법치주의의 유형

정답 ③

갑은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③ 통치의 정당성이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통치의 합법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①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②, ④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고려하는 을은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하고 법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⑤ 헌법 재판은 악법이나 공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그 의의를 강조한다.

18. 국제 사회의 특징

정답 ②

열강들이 고종의 밀사를 무시한 것은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ㄱ. 고종은 국제 여론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ㄴ. 국제 관계에서 이념이 아니라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 조약

정답 ②

제시된 규정은 핵확산 금지 조약이다. 조약은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원천으로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 명시적 합의이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조약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근거는 약속(합의)에 있으므로, 그 효력은 당사국에만 미치며 제3국을 구속할 수 없다.

20.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

정답 ③

③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이나 합의 시에는 1주에 6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에 46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① 을은 미성년자이지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라도 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다. ④ 15세 미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⑤ 최저 임금은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